

“의료용 대마, 규제 풀어 고부가 신약으로”

한국 의료용대마 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개최... 대마 성분 규제 완화 제안·활용 연구 모색

천연물 산업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Hemp)는 신약 등으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어 농업기술이나 의약품 개발, 식품산업으로의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대마의 유효한 성분을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약학계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회장 심현주)는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제안과 활용 연구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는 전북대 연구진과 한의학연구원, 정읍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완주에 위치한 아이큐어 등 많은 기관에서 함께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천연물 산업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는 대마의 유효 성분인 카나비노이드(CBD)에 대한 규제를 풀어 규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전북대 약대학은 신약개발연구소(소장 정재훈)를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대표 성분인 Cannabinoid(CBD)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특히 CBD의 합법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김문년 교수(계명대 약대)가 한국

대마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CBD의 합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활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테마조'라는 용어를 '대마식물'로 변경하고, THC 성분이 0.3% 이하의 농업관련 법령으로 관리하고, 그 이상은 의료용 대마 특별법을 제정해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규홍 단장(안전성평가연구소)은 대마의 성분인 CBD에 대한 효능에 대한 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손상에 이 성분이 효능이 있음을 제시했다. 심현주 회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의료용 대마 성분 중 CBD의 규제를 먼저 풀어달라요 요청하는 정책제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NH 교실숲’ 만들기 추진

전북교육청-NH농협 전북본부, ESG사회공헌 활동 진행 미래세대에 탄소중립·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 등 제공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NH농협은행 전북본부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지배구조 개선) 사회공헌 활동인 NH교실숲 만들기 를 함께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구살리기 실천학교 2년차 운영 중인 전주화산초등학교를 NH교실숲 제1호로 선정, 5학년 12개 학급에 탄소 저감 및 공기정화에 효과적인 멸종위기식물 300그루를 조성했다.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된 화분에 심은 식물은 학생들 개개인이 반려나무로 관계를 맺고 직접 관리 및 생육 활동을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기 전북교육청 장학관, 이규안 화산초등학교 교장과 장경민 NH농협 전북본부 본부장과 임직원 그리고 N통신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다. 교실숲은 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생활 및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의 하나로 교실 안에 미세먼지 차

단 및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을 화분 형태로 설치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도 제공한다. 이에 교실숲이 조성된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재활용화분 등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운영 및 활동을 하게 된다.

장경민 본부장은 “NH교실숲을 통해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반려나무를 가꾸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활동을 펼치며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

이달 말까지 실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주의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복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까지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및 복무 위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

강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막고, 업무에 매진하는 공직사

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 전체로 직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고등학교·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공립 유·초·중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복무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공직자의 정치

적 중립 위반 사례 ▲복무 위반 사례 ▲공직자 품위 훼손 행위 사례 ▲소극적 업무처리 등이다. 공직복무 점검을 총괄하는 김명자 감사2담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으로 공직 청렴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공직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선거철 공직복무 해이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자체 교육을 실시 등 공직복무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인권아카데미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5월 인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19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를 초대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들어본다.

김원영 변호사는 골형성부전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면서 칼럼니스트 겸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연극하는 변호사다.

한편 2022 인권 아카데미는 다양한 인권 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교직원과 교육 가족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8회에 걸쳐 운영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학부모 1040명 “천호성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학생·학부모 100% 만족, 현장교육전문가” 주장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 학교가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천호성 후보 지지 학부모 1,040명 일동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하나되는 교육공동체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교육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학부모 부담 감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줄 책임자가 천호성 후보라며 천호성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천호성 후보는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 상담 생활하도록 해줬던 15년의 교사 경험,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에서 15년의 수업 연구 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육감 후보라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특히 천호성 후보가 기초학력·돌봄 100% 완전책임제, 무상유아교육 완전실현, 학생청소원 기본수당 360만원 지원, 참고서 구입비 지원 등 학생·학부모 복지를 약속했다고 했다. 또한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해 학부모가 학교 자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진정한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 갈 후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천호성 후보는 유일한 50대 교육감 후보이며, 이는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전북도민의 열망이다”며 “20여 시민사회단체와 12만 5천의 선출인단이 참여해 선출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학부모 1,040명은 천호성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차기 교육감 적임자로 판단되며, 최선을 다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후보를 동료교수 폭행으로 고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서거석 후보 검찰에 고발장 제출”

“서거석 후보를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1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거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천 후보는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 11월 동료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을 명백했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 방송토론회와 SNS 등에서 서 후보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4월 28일 KIS TV토론회, 5월 6일 JTV 토론회, 5월 13일 KIS TV토론회까지 방송토론회에서 3번 부인했고, 심지어 5월 2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환경생명자원대학의 A교수와 당해 치러질 총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언쟁을 벌이다가 A교수를 폭행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가진 대학 총장



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평교수를 힘으로 찍어누르며 폭행한 사건이다. 폭력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서 후보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 후보는 “총장 시절 전북대를 청렴도 종합 최하위로 만들어 놓은 행정 실력, 도민을 우롱하는 셀프선거 의혹, 그리고 동료교수 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등에서 보듯, 서 후보는 아이들 앞에 떳떳한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서 후보는 반복된 거짓말에 대해 당당 도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전문직 포럼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주 더메이호텔 메이벨즈홀에서 2022년 1차 교육전문직 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및 학교 미래교육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 70여 명이 참여한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새로운 개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학교 지원의 최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메타버스의 실제((주)유코넷 박정호 대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호남대 이윤영 교수) ▲학교 미래교육 방안 탐색(남성중유미 교사)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메타버스, AI교육 등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접해야 하는 교육이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전문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미래 사회 주인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거점국립대 시설 공간활용평가 '1위'

공간관리 규정·제도·공간 활용·배정·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가 거점국립대 가운데 시설 공간 활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대학으로 손꼽혔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 국립대학 시설 공간활용평가에서 전북대학교가 국가 거점국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국립대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각 국립대의 공간 배분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예산을 분배해 효율적인 공간배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공간관리 규정 등 제도 기반 마련과 공간 활용률, 공간배정 현황, 초과공간 관리실적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으며 거점국립대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대는 시설

확충비 20%를 증액 받아 교육여건 개선 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동원 총장은 “비효율적인 공간을 최소화하고 공간 배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결과,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천호성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소”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 공표한 허색 선전”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허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여러 번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히라고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다가 급기야 ‘폭력’을 인정하고 후보직에 사퇴하라, 자신이 책임을 물겠다’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후보는 “법의 엄중함을 알



기에 최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천 후보의 반성 없는 악의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허색 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서 후보는 “진실규명은 법적 관건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책선거로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